

# 주호영, 윤석열 캠프 공식합류...“정권교체 희망”

### 17일 공동기자회견 열고 공식 합류

### “尹, 정권 폭압에 혼자 싸워온 사람”

### “대한민국 바로잡을 거라고 확신해”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공식 합류했다.

주 의원은 이날 윤 전 총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은 정권의 무지막지한 폭압을 혼자서 당당하게 대항해 싸워나오면서 절망에 빠진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에게 정권 교체의 희망과 가능성을 일깨워준 주인공”이라며 윤 전 총장 캠프 합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나마

정권교체의 당위성과 확신가지게 된 것은 오로지 윤 전 총장의 공이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주 의원은 윤 전 총장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

주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 “이재명을 막아내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룰 우리 국민의 필승 후보”라고 말했다. 또 “윤 전 총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인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라며 “무너져버린 헌법 가치와 법치를 바로 잡고 대한민

국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은 일기당 천의 윤 전 총장 뿐이라고 확신한다. 이는 그간의 그의 행적으로 증명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주 의원은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그 전부터 저희를 여러 면에서 도와줬다”며 “이번에 어려운 자리를 쾌히 수락해주셔서 저희 캠프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정치 입문 이후 꾸준히 주 의원과 접촉하며 조언을 얻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계 선배이기도 해서 존경하고 잘 따랐다”며 “3차 경선 들어가면 도와주겠다고 말해서 지금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과 함께 손잡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 국민의 열망 실현시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2시간 전인 이번 경선에서 윤 전 총장과 함께 양강을 형성 중인 홍준표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앞서 정지권에선 최 전 원장이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관

측이 나왔지만, 최 전 원장은 홍 의원을 택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경선에서 어떤 쪽 지지하든 원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송영길 대표 “이재명, 국감에 자신감...청문회처럼 임하라 부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야권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파상공세를 예고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당으로서의 대장동 사건이 오히려 이 후보의 행정 능력 입증, 청렴성 확인 계기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후보도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 본인하고 직접 통화해봤더니 너무 자신 있는 것이고,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한 번 언론에서 편집되지 않는 생방송 그대로 국민에 설명할 기회를 꼭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다)”며 “아무리 야당 후보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한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지사 국정감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라고 생각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그 결과가 잘 나와서 이재명의 반전 계기가 될 걸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개 경기도 지지자들이 서슬이 퍼렇던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검찰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광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투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며 “혹시 하자가 있었으면 그때 이미 수사돼서 아마 구속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는 이 후보를 대장동 몸통이라고 공격하지만, 대장동 비리 출발점은 부산 저축은행 비리 사건 때부터고 여기도 윤석열이 나온다”며 “당시 수사검사였고,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이다. 검경이 지체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유지 판결과 관련해서는 “공식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원팀 본선 우려와 관련, “이낙연 후보가 흔쾌히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文 대통령-李 지사, 이번 주 후반 회동 전망

### 경기도 국정감사 뒤...이르면 21~22일 만날 듯

### 文-李 회동 전 명각대전 마무리하고 ‘원팀’ 될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식 회동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카드를 꺼낸 가운데, 두 사람의 만남이 당내 경선 ‘여진’을 잠재우고 ‘원팀’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첫 공식 회동은 오는 21~22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후보는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참석하는 만큼, 회동은 그 뒤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후보 입장에서는 국감에서 대

장동 의혹을 털어낸 뒤 문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달 말 예정된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 주말 일정을 고려하더라도 21~22일이 시기로 적절하다.

양측은 아직 회동 형식이나 배석자 등에 대해서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치적 중립, 야당의 비판 등을 고려해 비공개 만찬보다는 오찬이나 차담회 형식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여권 일각에서는 경선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회동 전 ‘원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결

과제는 아니다”면서도 “대통령과의 회동 전에 당 차원에서 기존 후보들과 ‘원팀’을 만드는 게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경선에 승복했지만 아직 대장동 의혹이 걸려있는 만큼 경기도 국감 등을 지켜보고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치열하게 경쟁했던 여당 내 1, 2위 주자가 문 대통령과의 회동 전에 ‘원팀 회동’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지난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통해 공식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문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위해 이동하는 중간에 이 후보에게 “축하드린다”는 덕담을 건넸지만, 별도 만남을 갖지는 않았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소병철 의원 “검찰의 공소권

## 현재의 사법적 통제 역할 충실”

### 불기소처분 대해 취소...다시 1천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접수 건수가 13년 만에 다시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불기소처분 취소사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접수 건수가 전년 미제사건 299건을 포함하여 1,031건으로 2007년 이래 13년 만에 다시 1천 여건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처리 건수도 증가하긴 했으나, 처리되지 못한 미제사건 수가 2020년 338건으로 2006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362건에 달해 올해 통계가 다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작년의 기록을 넘어섰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이후,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인정해왔다.

한편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결정 건수는 2020년 62건으로 1988년 현재 설립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소 의원은 “검찰의 공소권에 대한 헌법의 사법적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불기소처분 취소소송과 같이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들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판진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